



# 축산정보

##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연면적 2백제곱미터(약 60평)를 초과하는 축사를 건축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축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집하장, 농업기계이용 부대시설, 계란집하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교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원칙 고수할 것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뼈조각이 크든 작든 위생문제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원칙을 지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또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FTA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천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 까지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5월에 미국이 이E로부터 광우병 상위등급을 받는다해도 수입위생 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한미FTA 체결에 대비한 축산분야의 사육·유통단계 HACCP 적용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검역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방침임도 밝히고 돼지의 경우는 축사 현대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친환경 양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유명무실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재개정 필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식육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관련단체의 제출의견 처리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식육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시 부과하던 과태료가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의 경우 700만원, 원산지 미표시 500만원, 종류 미표시 300만원이었으나 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완화된 반면, 축산단체 등이 원산지 표시 영업장 면적을 현행 3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 도축장 폐업 보상등 구조조정 지원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한시적 운용검토

농림부는 도축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가칭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에는 폐상보상금 지급,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한시적

용도변경 추진, 한시적 신규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도축장간 위생수준 차이에 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에게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달중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이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해 도축장·육가공장 운영자금 차등지원과 브랜드사업 참여 업체 및 육가공장 선별지원, 거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 무이자 적용(현 4%)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축산자조금의 취급수수료를 현행 3/100을 5/100로 인상하는 한편, 농가부담 완화 및 도축장 구조조정 저해인 해소를 위해 도축세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도축두수 1,300만두 기록

지난해 돼지 도축두수가 1,300만두를 기록, 2005년 도와 비교해 약 46만여두가 줄었다.

2006년 12월 한달간 115만7천704두가 도축되어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면서 1~12월 까지 집계된 도축두수는 1천300만3천286두를 기록, 2005년 1천346만4,995두대비 3.4%나 감소했다.

### 양돈사료 생산량 소폭 증가

지난해 양돈사료 생산량이 소폭 늘었다.

최근 농림부가 집계한 배합사료 생산실적에 따르면 양돈사료 생산량은 517만5천67톤으로 2005년 516만9천675톤보다 0.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월 한달간 생산량은 46만6천541톤으로 전년동월 46만8천761톤대비 0.5% 감소하고 전월 45만9천534톤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젓먹이돼지는 30만1천751톤, 젓뎀돼지 134만8천371톤, 육성돈전기 143만1천510톤, 육성돈후기 79만5천565톤, 비육돈 7만4천722톤, 비육돈출하 9

만6천418톤, 번식용수돼지 1만193톤, 번식용암돼지 1만5천759톤, 임신돼지 63만2천773톤, 포유돼지 46만8천5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 올해 식육 유해물질 잔류검사 '강화'

농림부는 올해 식품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식품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1% 증액된 2,187억원이며, 식품안전관리 인력도 증원된다.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는 식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체 잔류검사 계획 중 위반가능성이 높은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 비율은 지난해 10.8%에서 올해 13.5%로 늘어나고,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지난해 6,720건에서 올해 7,500건으로 늘려 강화될 방침이다.

### 이동식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기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가축분뇨 액비성분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식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액비성분 분석기는 근적외선을 액비에 투과시켜 비료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화학적 분해를 통해 액비성분을 측정하던 실험실 분석법과는 다르게 액비를 분해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 기존에 2~3일 걸리던 분석 시간이 1분 이내로 크게 단축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동이 편리해 분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최동윤 031-290-1715

## 종돈업 등록기준 단계적 강화된다

정부가 종축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축산업 발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5백5억원씩 총 4천 5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원종돈(GGP) 농장간 유전자교류가 이뤄질 돼지개량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한 종돈업등록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10년까지 원종돈 모돈 1백두(재래종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종돈장 10개소(개량종, 재래종 각 5개소)를 검정종돈장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독립법인체인 (가칭)돼지유전평가원을 설립, 이들 검정종돈장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분석, 평가 및 기술지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유전능력이 우수한 '공유씨수돼지 집단'을 확보, 농장에 대한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을 통해 유전자능력 평가를 추진하되, 검정완료 수퇘지에 대해서는 시세차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종돈의 선발, 이용은 물론 신품종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현행 종돈 1두로 돼 있는 원종돈업의 등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오는 '09년에는 종돈 50두 이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품종 50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종돈 집단을 보유한 종돈장이 집단유전평가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돼지유전평가원에서 국가단위의 집단유전능력 평가 실시토록 하되 독자적 유전능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형 종돈업체는 자율적 유전능력평가 및 종돈개량을 추진토록 했다.

정부는 종돈 및 정액 유통업에 대한 위생 질병관리 체계도 개선, 전염병 질병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위축공수이사 지정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와 위생등급 인증제와 우수시센터 인증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원종돈 농장에 대한 분만둔사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억제에 유도하고 돼지시센터에 대한 응돈구입비 지원과 함께 축산연의 돼지인공수센터를 핵돈군 시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종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각 단체의 세부 추진 계획과 의견을 수렴, 보완할 계획이다.

## 군장병 돈육 가공품 급식 증가한다

올해부터 군장병에게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공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방부는 올해 장병 급양(給養) 향상 방안을 통해 장병들에게 여문조사를 실시, 선호품목을 추가 또는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엔나소시지의 경우 연 24회에서 36회로, 1회 급식량도 70g에서 90g으로 늘이기로 했다. 또 장병들의 요구에 따라 로인햄슬라이스(돼지 등심가공햄)를 연 3회 식단에 추가하고 돈까스의 원료를 두들긴 순살로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장병 1인당 돼지고기는 살코기 60g/일, 돼지갈비 12g/일로 지난해와 같다.

## 남 - 북 평양에 양돈장 건설

북한에 남.북이 공동으로 양돈장을 세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양돈장과 치과병동 건설에 관한 의향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양에 들어서게 될 양돈장은 500마리 규모로 올해 안에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으며 규모와 자재반입 등 구체적 사항은 실무 접촉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올 봄 황사 조심하세요

최근 외신은 중국 환경보호총국장의 말을 인용, 올 봄 황사가 예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난히 건조했던 겨울 날씨 때문으로 황사의 발원지인 황

## 지난해 돈육자급률 75% 수준될 듯 하락속도 일본보다 빨라 위기감 고조

국내생산 감소와 수입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돼지고기 자급률이 사실상 70%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도축두수는 1천3백만3천2백86두로 전년대비 3.4%가 줄면서 지난 02년 1천5백30여만두를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돈육수입량의 경우 전년대비 21%가 많은 21만4백62톤을 기록,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축두수를 기준해 정육량을 환산(출하체중 1백kg, 정육률 48%), 수입량과 단순비교를 통한 자급률 산출시 지난해 돼지고기 자급률은 74.8%에 머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지난 04년 자급률 86.5%에 비해 무려 11.7%p가 하락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04년의 자급률은 86%로 앞서 도축두수와 수입량을 통해 산출한 자급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농경연의 한 관계자는 "각종 돼지소모성질환으로 인한 돼지도축두수 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해 자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따라서 지난 '04년과 같은 계산법으로 지난해 자급률을 산출한다고 해도 단순히 도축두수와 수입량을 감안한 자급률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속도는 일본을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업계에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돼지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미산 쇠고기 수입이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미FTA 체결까지 추진, 자급률 방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고원과 네이멍구 자치구 일대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상 전문가들은 금년 황사 발생 빈도가 더 잦고 농도도 진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축산 온실가스 감축 대책 시급 농경연 "13년부터 의무감축이행 불가피"

교토의정서(온실가스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것에 대비해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3년부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행이 불가피한 만큼 타 산업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많은 축산부문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육두수 증가 영향으로 13년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허용량을 양돈 11.4%, 축우 7%, 양계 19% 각각 초과하는 등 총 48만3천CO<sub>2</sub>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산업별 온실가스 CO<sub>2</sub>톤당 저감 비용은 양돈이 236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계 235만2천원, 축우 56만5천원, 음식료 45만원 순으로 축산부문의 비용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구원은 축산의 경우 온실가스 잉여배출량(예상 배출량이 배출 허용

량보다 적을 경우)이 생기는 경중, 농업관련 산업 등과 배출권을 거래해 비용을 낮추는 등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돼지고기 재고량 4천톤 넘어

지난해 12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4천톤을 넘어섰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조사한 돼지고기 재고량에 따르면 12월 조사재고량은 총 4천179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4월 기록된 재고량 이후 지난해 중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심과 후지, 갈비 부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등심은 조사재고량이 전월대비 36.2%가 증가한 601톤, 갈비는 전월대비 21.5%가 증가한 512톤, 후지는 전월대비 11.6%가 증가한 827톤을 나타냈다. 안심과 전지, 삼겹살과 목등심도 전체적인 증가세를 동반했다. 이들 부위는 각각 96톤과 473톤, 1천147톤과 329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9.5%, 1.6%, 6.9%, 4.5%씩 증가했다.

##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 추진

홍문표 의원 등 입법 공동 발의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지난 2월 8일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가 감면되어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 면세 규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 등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영농비를 덜어주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

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영구적 면세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축산정책과장에 민연태씨 축산자원순환과장에 이상철씨



민연태 축산정책과장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

농림부는 지난 2월 12일자로 민연태 맞춤형농정팀장을 축산정책과장으로, 이상철 자연순환농업팀장을 축산자원

순환과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민연태 신임 축산정책과장은 '61년 전남 영암 출신, 고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37회에 합격했으며 지난 '94년 농림부에 첫 발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다.

이상철 신임 축산자원순환과장은 '58년 부산 출신, 경상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으며 '85년 축산연구소에서 근무, 2003년 농림부로 발탁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 '우리밀축산농장' HACCP 적용농장 첫 지정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재 '우리밀축산농장(대표 구금회)'이 돼지사육단계 HACCP 적용농장으로 첫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안양 소재 HACCP기준원에서 우리밀축산농장에 대한 HACCP 적용농장 지정식을 개최했다. **양도**

